

제426회 국회  
(임시회)

##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1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 1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 2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 2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 2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 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 2

(10시18분 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10시19분)

○소위원장 정일영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세부사업은 지방채 인수 사업입니다.

현 계획은 2100억인데 추경에 1조 원을 증감해서 변경안은 1조 2100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인수 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채 인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기초 지자체의 인수 비중은 낮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채 인수 실적이 부진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채 인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주장을 기반으로 부대의견안을 내셨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채 인수계획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해당 부대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 계시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채를 인수해 주면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이자가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일반 지방채하고? 기금에서 인수해 주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정동영 기재부 국고과장 정동영입니다.

보통 국가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면 현재는 한 2.7 정도 되고요, 만약에 그것을 민간에서 인수하면 경쟁률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한 30bp 정도 차이 납니다, 0.3%p.

○김태년 위원 0.3?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정동영 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던 이자 대비 이렇게 인수해

주면 한 0.3%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정동영**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 민간에서 인수할 때하고 국가에서 인수할 때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인수해 주는 거니까 한 0.3% 정도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고 이 말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정동영**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른 의견?

○**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 인수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모든 지방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희가 1조 범위 내에서……

○**박성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 내에서 인수를 하는 거고 민간하고 공공부분의 이차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의미인 거지요?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정동영** 실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가가 인수를 하고요.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인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정동영** 전체 인수는 아니고 그 지방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수요를 제출합니다. 수요를 제출하면 그것을 전체 다 인수하지는 못하고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채 인수계획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잘못 오해가 되면,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다 상이한데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도 다 인수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이 문구를 분명하게 하자면 예를 들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무슨 단서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정동영** 저희가 그렇게 적었던 문구는 국회에서 지방채 인수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것 안 붙여도 기재부는 짜요. 많이 안 잡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를 도와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하여튼 여기에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이렇게 또 조건을 붙였으니까.

○**김태년 위원** 여기다 붙였으니까.

○**이인선 위원**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특별한 의견 없으니까……

다음, 복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페이지입니다.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있어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현재 12억 8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25억 7000만 원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시설(의정부, 창원)을 신규 조성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는 센터의 위치를 법원을 방문하는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사무실 매입 등 후속절차를 일정 내에 차질 없이 진행해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당연히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도 질문.

그러면 기존의 12억 8500만 원 이건 어디다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이번 예산을 통해서 의정부, 창원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증액분을 가지고 의정부하고 창원이고. 기존 12억 8500은 어디다 만드는 거였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본예산에 있는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래 하려던 것은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인천 한 군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태년 위원** 인천 한 군데인데 세 군데로 늘린다, 추경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드리면 고등법원하고 지방법원에 있는데요 고법이 있는 여섯 군데는 이미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이미 다 했고요. 그리고 지방법원 중에 울산은 이미 작년 이전에 했고 올해 인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나머지 6개 중에서 두 군데인 의정부, 창원을 하고 그러면 네 군데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훈 위원** 네 군데는 기재부가 볼 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현재 파산사건 상담 신청내역이 있는데요. 신청한 것을 보면 의정부, 창원은 1000건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아직 1000건이 안 돼 가지고 우선순위 차원에서 선정된 걸로 이해합니다.

○**김태년 위원** 당장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희생·파산지원센터를 지금 고등법원이 있는 곳 그다음에 지방법원이 있는 곳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지원 중에서도 인구를 아주 많이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150만씩, 135만 이상씩 이런 데가 있다고. 이런 데는 거의 지방법원급이거든, 급 자체가. 이런 데도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겠습니다. 수요량하고 같이 비교해가면서 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럴 거예요,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지원인데 거의 지방법원 정도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12억 8500만 원, 우리 인천에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사무실을……

○**소위원장 정일영** 산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매매계약을……

○**소위원장 정일영** 임대겠지.

매입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매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비용이 아리까리하네. 매입치고는 적고 임대하기는 비싸고.

매입이에요? 그러면 의정부, 창원 이런 곳도 다 매입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매매계약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태년 위원** 이걸 한 층 정도 있으면 되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조금 작으니까 그러네, 한 층 정도.

○**김태년 위원** 좀 큰 건물 한 층 정도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스페이스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가지는 센터를 매입하는 사례가 많았나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대부분 임차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나요?

이게 복권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건지, 그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욱입니다.

회생법원이 전국에 열네 곳이 있습니다. 그 열네 곳의 회생법원 주변에 동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고 이 회생법원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마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 만료 뒤에 원래 있는 건물주가 바꾸라고 그러면 또……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또 이사 가야 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서비스 기간이 변해 버리는 그런 것도 감안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또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는 것도 의미는 있겠네.

이것하고 조금 다른데, 복권기금은 아니지만 성격은 비슷해서 제가 차관님께, 정부 측에 드리는 말씀인데 국유재산관리기금 이번에도 좀 들어가잖아요? 본 추경예산안 계획에는 들어가 있더구먼.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국유재산관리기금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서 증액들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게 다 무산됐거든. 이번에 예산 짤 때 그

증액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좀 짜 오십시오.

김태년 위원님, 그렇지요?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오셨나? 누가 하시나,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정동영 국고과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작년 자료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아시지요, 증액했던 것들?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정동영 예.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페이지 1번입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정사업으로 지정하지는 않으셨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부대의견안을 보시면 기획재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한 추가 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서면질의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가 어저께 차관님께도…… 차관님이 약간 우물우물 자신 없듯이 7월 말에 집행된다고 말했는데 7월 말까지 확실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7월은 확실히 되고요. 다만 그걸 더 당기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행안부 TF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빨리해서 더 빨리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게 차등 지급이 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기재부 또 행안부 관련 되는 부서, 결국 복지센터까지 다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금융기관에 다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차등 지급은 두 번째 지급이고요. 두 번째 지급은 7월 안에는 어렵고, 1차 지급하는 것.

○소위원장 정일영 15만 원만 7월 달에 다 지급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5만 원이고 차상위는 30, 기초는 40까지 주는 그 돈은……

○소위원장 정일영 그게 1차?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것을 빨리 당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일영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차상위 이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 위에는 저희가 필요가 없으니까, 다 줄 수 있으니까 선별 작업은 없고요. 저희가 빨리 자금을 쫓아 주는 작업 이런 거랑 용처, 이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용처를 빨리 정해……

○소위원장 정일영 그걸 본인들이 신청해야 줄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쫓아 줄 거예요? 그것을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은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 방법이 뭐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류로 받을지 아니면 선불카드로 받을지 본인의 신용카드로 받을지 그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태년 위원 지자체에서 쏘는 거라서, 중앙정부가 직접 쏘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받아서 쏘아 주는 거라서. 지자체에 그 시스템들이 상당히 구축이 되어 있어요, 각종 수당들 지급하는 체계들이.

○소위원장 정일영 행정안전부와 구청에 있는 것들?

○김태년 위원 시군구에 이게 다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받을 건지를 지자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신청해야 되는구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야지 신용카드에 넣어 줄지 선불카드에 넣어 줄지 직접 상품권을 받을지.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휴대폰으로 착착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워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김태년 위원 지역화폐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있어요?

○김태년 위원 예, 거기는 거기다 쏘아야 되고, 원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역화폐 전용카드도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거기다 쏘아 주는 거거든.

○소위원장 정일영 하여튼 국민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보면 되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받는지 자꾸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내가 시원하게 대답을 못 드려 가지고.

○김태년 위원 다양한 방식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하여튼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여기 부대의견이 신속하게 하라는 건데요 실제로 신속하게 되면 어저께 행안위에서 통과된 지자체의 부담을 없애 줘야 이게 신속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 10% 부담 때문에……

○이인선 위원 없애는 걸로 안 나왔습니까, 어제 행안위에서?

○김태년 위원 행안위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 기재부가 아직 수용을 안 하고 있거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결위에서 아마 논의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논의되겠지. 수용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야 신속하게 되겠네. 그렇지요?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진작을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목적이 내수진작이라고 하면 소비쿠폰에 대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4조 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기재부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건 연구단체에서 다양하게 분석돼 있는 게 있고요.

○박성훈 위원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 KDI에서 코로나 시기의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비진작 효과 분석이 있잖아요. 높지가 않아요, 20% 중반에서 30% 초반 정도고. 그 이후에도 경기연구원이란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만한 돈을, 그것도 적자 국채를 약 19조 8000억, 20조가량 발행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분명한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GDP 성장률 기여도가 얼마인지 분석 자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디테일한 부분은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요. 이번에 저희들은 그 당시 2020년과 다르게, 그때는 현금이 들어갔고 시간 제한이 없고 또 비대면으로 행동이 다 제약된 상태에서고요. 지금은 저희가 용처를, 시간 제한을 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쓰게끔 하고. 그리고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이거를 아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써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이 될 거고 저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늘 거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늘지 정확하게 현재 분석된 것은, 그것보다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8년 연속으로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을, 실은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들이 남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우리나라 재정의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명확한 근거 자료나 분석 자료 없이 그냥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간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태년 위원 조세연구원에서 해 봤고 KDI도 해 봤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 연구원 자료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내가 다 봤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해 봤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사정하고 지금은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고……

○박성훈 위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0조에 가까운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돈의 가치를 따져 볼 때, 밸류 포 머니(value for money)를 볼 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각차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주장을 하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자료 하나 없이 그냥 ‘이게 아마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들은 다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에 불과하지 새로운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분석되어 있고.

대부분의 용처가 차관남도 아시겠지만 학원, 병원 이런 거예요. 결국 과거의 지역사랑 상품권도 보게 되면 타 지역의 소비를 구축하는 효과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신규 수요를 촉발해서 우리의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타 지역의 소비를 구축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만 그게 갖



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전국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없고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박성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쇄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게 아니고 그 지역에 쓰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에 안 쓰고 쓰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박성훈 위원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존 소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4개월 내에 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이번에 용처를 제한할 때 현금같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영세한 소상공인에 쓸 수 있도록 많이 해 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금액도 차등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분들 한계소비성향이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대체효과보다는 바로 나타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기록에 남는 거라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쿠폰을 맨 먼저 시행한 데가 제 지역구 아닙니까? 성남시 아니에요, 지역화폐를? 코로나 때 말고라도 그 전에. 골목상권이 많이 활성화돼요, 이걸 발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어요. 그것을 상인들이 피부로 느낀다고. 아주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행을 늘려 달라고 늘 요구를 하지요. 만약에 승수효과가 없어 가지고 소비진작 효과가 없어서 매출이 실제로 늘지 않는다면 상인들이 그것 늘려 달라고 요구하겠어요? 실제로 느니까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층위별로 소비 형태가 좀 다를 텐데 저소득층은 한계소비 효과가 커서 1에 수렴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중산층 이상도 조금 받아도 거기다가 더 보태서 소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정일영 위원님도 그러시죠?

○소위원장 정일영 맞아요.

○김태년 위원 받으면 보태서 소비하죠?

○소위원장 정일영 부족하니까.

○김태년 위원 기존에 계획 세워 놔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어서 못 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지출을 한다거나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우리보다 국가재정 상황이 훨씬 안 좋은 국가들,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훨씬 높은 국가들도 이 정책은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비단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은 이구환신이라고 한 제품 새것으로 바꿀 때 지원해 주는 정책도 합니다. 한 제품,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는 데 지원하는 정책도 해요. 그것 실질적으로 현금 지원이거든요, 효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부양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이런 정책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인 것이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좋아요. 두 분 위원님 말씀 저도 거의 비슷하게 공감하는데, 우리

지역에 제가 돌아다녀 보면 며칠 전에도 족발집에서 밥 먹는데 사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언제……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언제 주냐고. 그 손님은 자기 와이프하고 나와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도 보통 손님이 한 7~8시 되면 솥에 한 60~70%는 꼭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밖에 안 차요.

그런데 저도 이것 연수e음 카드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좋거든. 지역화폐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나눠 주면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많이 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지역만 해도 표시가 나요.

그런데 그걸 연구한 보고서들을 저도 좀 봤는데 이게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또 되게 보수적으로 뭘 그렇게 엄격하게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보고서의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보고서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시간이 되면—이번에야 어렵겠지만—정말 연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대신 경제 보고서라는 게 항상 가정, 컨디션, 어설편(assumption) 이걸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아니 분명히 현장에서는 있는데 보고서에는 그게 조금 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좀 많이 있다고 한 보고서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제대로 연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박성훈 위원님 말씀도 있고.

○박성훈 위원 제가 좀 더 말씀을 이어 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7년 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발행된 규모를 따져 보면 70조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한 게 한 3조 5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경기진작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게 있었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해 본 일이기 때문에, 이제 7년 정도면 어느 정도 경험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국가가 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국가들, 과거에 시행을 했던 국가들이 있어요. 영국,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정부가 우리나라처럼 8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이어 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용처에 대한 제한이 저희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지역사랑은 골목상권……

○박성훈 위원 얼마지요, 금액이? 매출액 기준입니까, 영업이익 기준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어떤 대상 업체에 대한 기준입니다.

○박성훈 위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태년 위원 매출도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있을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 기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저희 담당자가……

○김태년 위원 10억 이하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일영 누구 없어요, 관계자분?

○김태년 위원 매출 10억 이하 아니에요?

○박성훈 위원 그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아니라 연매출 30억 이하로 잡았을 겁니다.

○김태년 위원 30억 이하인가, 10억 이하인가.

○소위원장 정일영 그 정도로 잡았을 거예요.

그것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따가 확인해서 누가 회의 끝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 따로 별도로 보고를……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게 영세 자영업자 소비 유발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제한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저는 들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한다는 거에만 매몰이 돼서 이러한 분석이나 자료 없이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정말 지역사랑상품권 이 정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급여를 한번 지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라의 빚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면 거기에 부합하는 상응하는 자료 분석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밸류 포 머니를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반대를 하시고 또는 반대 논리를 펴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도 어떻게 대통령 월급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보라고 하는,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박성훈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취지가, 일단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태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통령이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을 다 소비를 합니까? 그런데 대통령 월급을 지역화폐로 발행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도 적절한 예를 드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말에 강하게 반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린 취지를 고려해서 그 효과가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면……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호텔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이런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재정 당국에서는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태년 위원 계속 논란하기가 싫어서 말을 멈추려고 했는데, 아까 몇 년간 계속해서 이 정책을 폈는데 이게 성공했다고 하면 경기가 이렇게 침체됐겠냐 이렇게 논리를 펴는데 경기라고 하는 것이 또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특정 정책 하나만 가지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종합적인 효과들을 발현시켜서 그렇게 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과한 논리이신 것 같아요. 지역화폐 얼마나 했다고 이것 칠팔 년 했는데 경기가 이 모양이어서 이 정책은 실패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잖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계속 하루 종일 논란을 벌일 수 있는 건데, 저도 위원님 말

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런 민생회복쿠폰, 지역화폐 등등은 최근에는 발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 발행된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경기 좀 좋아졌고, 최근에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 한 3년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호텔경제학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역경제, 민생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안 돌아가니까 마중물 역할로 순환시키는 데 재정이 좀 들어가서 지역에서 돈이 좀 돌아가야 경제가 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인선 위원님.

○이인선 위원 저는 간단해요. 아무튼 지난번에 분석 자료들이 너무 클래식하게 해서 그런지 20~30%밖에 없다는 것은,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왜……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마 그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이게 제대로 간 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느끼는 사람이 ‘아, 좋아졌구나’가 데이터상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골목에서는 굉장히 기다리고 힘든 것은 맞는데 이게 어쨌든 올해 한 번 하고 말지 또 내년에도 해야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해 주시고.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하면 중간에 낙전, 코나아이가 중간에서 뭘 하나 이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기재부에서는 명백하게 이렇게 가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는 걸……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현금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할 때는 중간에 골목 안의 사람들이 이게 낙전도 있고 어찌고 하는데, 코나아이가 돈을 다 벌었다 하는데, 카더라로 이렇게 나는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매출은 30억이네요. 제가 10억으로 착각했던 것은 경기지역화폐가 10억 이하에만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소위원장 정일영 하나로마트를 넣느냐 마느냐, 대형마트 규모 이런 것은 다 충분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년 위원 그건 다 빠져 있어요. 대형 유통점은 다 빠졌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게 다 빠지고, 왜냐하면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지. 정부 측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파악이 안 된 것은 이따가 추가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박성훈 위원 마지막으로 차관님, 아르헨티나가 지역화폐를 공무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차초(Chacho)라고 해 가지고요 지역화폐도 공무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역사랑상품권 급여 지급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앞에서 다른 나라들도 이러이렇게 해서 다들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런 사례도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하시지요.

○김태년 위원 우리가 심사할 것도 아닌데 부대의견 하나 가지고 참 오래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제가 부대의견을 신속하게,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김태년 위원 늘 위원장님이 문제야.

(웃음소리)

○소위원장 정일영 족발집에서 기다린다니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족발집에서 기다리니까 국민들한테 빨리 ‘지금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1번 부대의견은 채택되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예, 빨리 지급돼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에 4페이지 2번입니다.

올해 2회 추경예산안에 500억 이상 지출구조조정 사업 20개 중 SOC 사업은 4개이나 이 중 영남지역 사업은 3개로 지역적 편중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사업의 삭감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삭감 등은 부적절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재부는 SOC 사업 및 저소득층 대상 사업들의 지출구조조정은 지역 균형발전, 서민 예산의 감액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지역균형발전 및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번의 지출구조조정은 어떤 지역적 검토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연례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다 해서 사실상 올해 나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저소득층과 관련된 게 없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 말은 맞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이인선 위원 이게 시기가 조정되는 거지 없애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김태년 위원 당연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면 또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인선 위원 내가 궁금한 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이렇게 감액해도…… 이게 집행이 잘 안 됐던가 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5월까지 33% 정도입니다.

○이인선 위원 이것 꼭 가야 되는 건데 왜 그러지?

○김태년 위원 예결위에서 근로장학금 삭감 가지고 공방을 벌이던데 그것은 신청자는 많은데 실제로 사업 발굴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사업 발굴을 못 해서, 그러면 공급이 못 따라간 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근로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집행이 거의……

○**김태년 위원** 그래서 사업 발굴을 조금 더 서둘러야 되겠던데요. 내가 그것 공방하는 것 보면서 ‘교육부 뭐 했지? 왜 사업 발굴을 이렇게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박성훈 위원** 차관님, 방금 이게 추경 원칙에 맞지 않아서 부대의견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추경 내역을 보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비 지원 예산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추경 성격에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그 내용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기재위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방금 추경 원칙에 맞지 않아서 부대의견으로 반영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여쭙보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말씀드린 감액 사업은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것을 구조조정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사업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저희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기재위에서 그것을 안 하니까 그러는 모양이네.

○**김태년 위원** 예결위에서 하겠지요.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수용 곤란한 것으로 하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경안에서 감액된 국토교통부 소관의 SOC 사업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액 현황은 박스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재부는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요 지역사업을 삭감하기 전에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앞단에 있는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삭감 전에 국회에 사전 보고하자는 말씀은 국가재정법이나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 사이에 어떤 취지가 있는데, 그래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뒷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도 가급적 친절하게 국회에다 설명해 주면 좋은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일영** 갑자기 그렇게……

○**김태년 위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죄송합니다. 사전 보고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거라서요.

○**김태년 위원** 명문화는 안 하더라도 태도와 자세는, 와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것은 사실상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여차저차해서 이게 감액이 되기는 합니다’라는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진도가 나가게 되면 내년엔 잘 편성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국회 예산안을……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채택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자세는 그래야 된다고.

○**소위원장 정일영** 김태년 위원님 뜻을 내가 유추하면 사전 보고 절차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삭감하는 게 주로 SOC 예산들이니까 국토부 예산들이거든. 그러면 기재부에서 국토부 철도국장이나 기획실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조금 드리라고 해요. 그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그냥 짝둑 잘라 버리니까 서운하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뜻이니까. 관계부처, 주로 국토부 사업들이거든요.

○**김태년 위원** 설명을 잘하면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산안 제출 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은 정리되는 게 ‘협의하고’까지만 담아서 문구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는 SOC 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라’ 이런 문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수석님께서 그것은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저희가 받아서 자꾸 정리는 소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행정도 친절해야 돼요, 친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은 과기부 소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AI 산업생태계 완성을 통해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광주를 AX 실증혁신거점으로 구축하고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의 조속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획재정부는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2026년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7월 중 국무회의가 의결되도록 하고 26년 본예산에 국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저희가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관계없는 건 수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취지는, 내가 질문 하나.

지금 광주에 만들어 놓은 AI 데이터센터, 지금 광주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전에 우리가 예타 면제해 가지고 정부 지원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이 빨리하고 AX 실증빨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아마 다른 것일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른 분 누구 없나, 아시는 분?

○**김태년 위원** 그때 광주 AI 중심도시 하려고 이 AI 관련한 사업들을 예타 면제를 할 때 내가 기억을 좀 해 보는데 그때보다도 상당히 규모도 줄었고 속도도 좀 느려요. 그런데 우리 정부 데이터센터가 지금 광주에, 그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관련해서 이 사업이 효과를, AI와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기에 지원해서 적기에 구축하고 또 그를 통해서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유의 사업을 자꾸 예타로 묶어 가지고 시간을 끈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주 유연하게 예타 면제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부대의견을 채택하지는 않더라도.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하여튼 부대의견 채택 않더라도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김태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담당 부서에 전달을 꼭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전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예산심사와 관계없이 지금 많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남해안에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딱 걸려요. 전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보내 줄 수 있느냐, 얼마나 싸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걸려요. 싸게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국가 정책하고도 관련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두더라도 제때,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변전소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한전이 계약을 먼저 해 와라 이런 거예요, 계약을 먼저 해 와라. 그런데 그 투자하려고 하는 데서는 전기 계획부터 나와라. 이런 미스매칭 때문에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

그런데 한전이 왜 그렇게 하느냐? 감사원이 무서워서 그래요, 감사원이 무서워서. 계약서도 없는데 선행해서 변전소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음에 감사원의 지적 또는 처벌 받을까 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정책 당국에서 컨트롤 잘해 가지고 이런 게 늦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사원 개혁도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말로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 키를 딱 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이 부분은 네이버에 근무했던 AI 수석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광주에 실증빨리를 너무 크게 했을 때 아까처럼 문제가 되면 좁혀 갖고, 데이터센터 갔으니깐 어떻게 중점적으로 할 건가를 아마 적정성 검토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 해도.

○**김태년 위원** 광주에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작아요.

○**이인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위원장 정일영**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메모했다가 전달하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제가 메모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거의 다 됐는데,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보니까 해경 계 2건인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 아는 분 있나요?

○**박성훈 위원** 예산실 직원이 없어서 아마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정일영** 전혀 모르는구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해경 사업이 해경 특수기록관 신축하고요 해경 완도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그다음에 동해서 울릉 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사업인데요.

이게 들어간 사유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그동안 일부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진도가 좀 늦었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게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추경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그런 내용들이, 정부기관 신축 등등이 추경에 들어간 게 좀 드문 일인데 재미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예산 들어가면 다 완공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부 완공되는 것은 아닌데요. 공기를 신속하게 하는 거고요. 일단 건설업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것 한다고 건설업이 뭐가 되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까 정부에서 말한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마 증액시킨 부분은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올해 다 집행?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벌써 7월인데 집행들이 다 되나 싶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일부 사업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공기 단축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약간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요.

○**박성훈 위원** 이게 민주당이 당시 야당으로 계실 때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정부 여당이, 당시에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그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추경을 통해서 당시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이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국고국 국유조정과장입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공사가 중단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연내에 완공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완공이 됩니다.

○**김태년 위원** 잘했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잘했어요, 진짜. 그러면 빨리빨리 완공시키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례차례 7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은 빼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은 빼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은 빼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은 빼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형일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 ○출석 위원(4인)

김태년 박성훈 이인선 정일영

#### ○청가 위원(1인)

박홍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욱